

1월 셋째주(1.8-1.14)

[산업] 산업부, 한중FTA 등을 활용한 수출회복을 2016년 목표로 제시

[금융] 금융위 가계부채 대응, 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효과 적을 듯

[거시] 한국은행,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3.2%에서 3.0%로 하향

조정, 세계경제성장률도 3.4%에서 3.2%로 하향

[지역경제] 제주 제2공항, 주민수용성 고려 안 해

□ [거시] 한국은행,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3.0%로 3개월 전보다 0.2%p 하향 조정, 세계경제성장률도 3.4%에서 3.2%로 하향

○ 한국은행, 「2016년 경제전망」 발표 (1.14.)

○ 주요 내용

- 세계경제

세계 경제성장 및 원자재가격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15년	2016년			2017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세계 경제성장률	3.0	3.1	3.3	3.2	3.4
미 국	2.4	2.3	2.4	2.4	2.3
유 로	1.5	1.6	1.9	1.7	1.8
일 본	0.6	0.7	1.2	1.0	0.7
중 국	6.9	6.7	6.6	6.6	6.4
세계교역신장률	2.7	2.8	3.4	3.1	3.6
원유도입단가(달러/배럴)*	53	39	49	44	52
기타 원자재가격 상승률	-17.5	-	-	-7.5	2.0

*원유도입비중: 중동산 80%, 여타 20%, 기간 평균, CIF 기준

미국: 민간소비와 주택투자의 견조한 증가세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나 달러화 강세 지속, 신흥국의 성장 둔화로 수출 및 제조업 생산이 부진할 가능성. 또한 향후 금리인상은 완만한 속도로 이루어질 전망

유로: 소비 등 내수를 바탕으로 한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할 전망

일본: 기업부문의 호전에 힘입어 성장률이 다소 높아질 전망이나 회복세는 약화된 상황

중국: 수출 및 투자 부진 등으로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나 서비스 생산 및 소비의 견조한 성장 등으로 6%대 중반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

기타: 브라질, 러시아 및 산유국 등 자원수출국은 원자재가격 약세, 내수 부진 등으로 금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될 전망

- 국제유가

이란의 원유수출 재개, 중국 등의 수요 부진으로 원유의 초과 공급이 지속되고 달러화가 강세에 따라 저유가는 계속될 전망

- 국내경제

민간소비: 2015년 가계 실질구매력(실질임금×취업자수) 개선이 시차를 두고 2016년에 영향을 미치면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설비투자: 대내외 경기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증가폭이 둔화될 전망

※ 참고: 2016년 주요 투자활성화 정책

- 1) 공공기관 투자계획 확대(6조원)
- 2)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SOC 확충(8.4조원 이상)
- 3) 통신(5G, UHD) 및 에너지 신산업 투자 유도(5조원)
- 4)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잔여분 2016년 중 전액 집행(15조원)
- 5)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본격 가동(14.5조원)

건설투자: 주거용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경상수지: 2016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980억달러로 예상되며 2017년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라 흑자규모가 감소될 전망

경제성장 및 물가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15년			2016년			2017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경제성장률	2.3	2.9	2.6	3.1	2.9	3.0	3.2
민간소비	1.6	2.6	2.1	2.8	2.0	2.4	2.3
설비투자	5.4	4.7	5.1	3.0	4.7	3.8	4.2
건설투자	1.2	6.7	4.1	4.8	2.4	3.5	2.8
상품수출	-0.9	1.0	0.1	1.9	2.5	2.2	2.8
상품수입	0.4	2.9	1.6	3.4	0.6	2.0	2.6
소비자물가	0.5	0.9	0.7	1.2	1.5	1.4	2.0
농산물·석유류 제외	2.2	2.2	2.2	1.9	1.8	1.8	1.9
식료품·에너지 제외	2.2	2.6	2.4	2.0	1.8	1.9	1.9

○ 함의 및 전망

- 한국은행이 1월 14일 발표한 올해(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0%로 지난해 10월 15일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3.2%보다 0.2%p 낮은 수치로 지난해 7월의 3.3% 성장 예측에 이어 계속해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음.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상반기 1.2%, 하반기 1.5%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 또한 지난해 7월의 전망치 1.9%, 1.8%나 10월의 전망치 1.6%, 1.8%보다 0.3%p 이상 하향 전망하고 있음

- 이는 정부가 예산편성 시 가정한 (실질)경제성장률 3.3%나 지난해 11월 OECD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3.1%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금년 경제성장률을 2%대 후반으로 예측한 민간경제연구소들의 전망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 특히 수출의 둔화세 속에 내수 중 투자는 주택건설이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소비 증가는 전년도(2015년) 실질구매력 개선에 따른 것으로만 전망하고 있어 믿을 만한 성장 동인의 부재가 우려되는 상황임
- 또한 가계부채 및 기업부채의 증가가 급격한 가운데 2016년 예산 기준으로 관리재정수지 36.9조원 적자와 함께 국가채무는 2015년보다 8.4%(50조원) 증가한 644.9조원으로 GDP대비 40% 수준을 처음으로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리도 미룰 수 없는 상황임

□ [산업] 산업부, 한중FTA 등을 활용한 수출회복을 2016년 목표로 제시

- 1.14. 산업통상자원부, 2016년 연두업무보고 「한중 FTA 등을 활용한 수출회복」
- 주요 내용

분야	정책과제	주요 내용
시 장	한중 FTA·정상외교 활용, 맞춤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내수시장 본격 진출로 FTA 성과 극대화 - 선진시장·신흥시장 등 맞춤형 시장 진출전략 - 정상외교 및 메가FTA를 통해 미래교역기반 확대
품 목	소비재·서비스, 기술·브랜드로 다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재·서비스 무역금융 2016년 4.8조원 지원 - 기존 주력품목 수출 회복
주 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2016년 3000개사 신규수출성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인력·세제·금융, R&D 등 정부지원 집중 - 종합상사(전문 무역상사포함)와 대기업 역직구몰 활용,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
방 식	전자상거래 수출 획기적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온라인몰(아마존, 타오바오 등) 진입 장벽 등 온라인 해외 판매 단계별 애로 해소 - 한중일 디지털 시장 단일화 로드맵(안)을 하반기 중 수립(기재부)
지 원 체 계	제조업 위주 → 소비재·서비스 분야까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부 유관 수출지원기관의 기능을 제조업 중심에서 소비재·서비스까지 포괄·재편, 분야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수출기업 애로 원스톱 해소체계 구축을 위한 산업부장관 주재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 매월 개최

- 1.14일(목) 10시 기재부·농식품부·산업부·해수부·국토부·공정위·금융위 등 7개 부처는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함
 - ※ 2016년 정부업무보고는 1.14~26일까지 ①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②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③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④평화통일기반 구축, ⑤국가혁신 등 5개 핵심주제를 중심으로 진행 예정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 등을 활용한 수출회복’을 목표로 제시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5대 정책과제를 발표함

○ 합의 및 전망

- 2015년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904억 달러 흑자였지만, 수출은 전년대비 7.9% 감소한 5,272억 달러, 수입은 전년대비 16.9% 감소한 4,368억 달러를 기록함
- 한국경제의 취약한 내수기반이 단기간 내에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수출 규모의 유지 및 확대는 국내기업의 경제활동 지속에 있어서 필요조건임
- 비록 무역수지 흑자가 발생했어도 수출 감소는 직접적으로 수출기업의 성과 축소를 의미할 뿐 아니라 전체 기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2016년 수출회복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정책 방향이 자체적인 수출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대기업과 함께 주로 중소·중견기업에 맞춰져 있다는 점은 바람직함
-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2016년 세계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과거 키코(KIKO, Knock-In Knock-Out)사태와 같이 환율변동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부처와 함께 지원체계에 고위험 금융수단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및 밀착형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 [금융] 금융위 가계부채 대응, 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효과 적을 듯

○ 1.14. 금융위원회, 「2016년 대통령 1차 업무보고: 가계부채 구조개선 및 상환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완화하고 질적 구조개선을 가속화하기 위해 '상환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방식을 강조. 이는 지난해 객관적인 소득증빙, 분할상환, 총체적 상환부담 평가를 활용한 사후 관리시스템 등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의 연장선
-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소득증빙을 통해 상환능력을 꼼꼼히 확인 △주택구입자금 등 비교적 큰 금액의 대출은 처음부터 분할상환 △변동금리 대출은 미래 금리인상 가능성을 고려, 대출금액 산정 △총체적인 상환부담 평가를 활용한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 그러나 금융위 가계부채 가이드라인은 집단대출*을 단기 소액, 긴급 생활자금 등과 같이 예외로 하여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지 않음

* 집단대출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특정 차주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을 일괄승인하는 방식으로 취급되는 여신으로 신규분양·재건축·재개발아파트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취급되는 대출을 말한다.

○ 합의 및 전망

-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한 까닭은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때문인데, 이는 집단대출 수요 증가와 주택거래가 예년 수준보다 증가하면서 빚어진 결과임. 따라서 가계부채 증가는 집단대출에 대한 해법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역지 될 수 있음
- 그러나 금융위가 이 문제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아 향후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효과는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집단대출은 과거 주택 대량공급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현재 이 제도가 존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당장에 폐지하기는 어려움. 최소한 분양·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심사는 실시되어야 함

□ [지역경제] 제주 제2공항, 주민수용성 고려 안 해

○ 1.8. 제주 제2공항 설명회 ‘아수라장’ (조선일보 외 관련기사)

○ 주요 내용

- 1월 7일 10시 30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열기로 했던 ‘제주 제2공항 주민 설명회’는 예정부지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 의해 중단되었음. 11시에 3.5km떨어진 성산읍사무소로 설명회 장소를 옮겼으나 주민들이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상황까지 벌어져 10여분 만에 설명회가 중단되었음. 성산읍사무소 설명회는 성산주민 4명 외 대부분 공무원과 경찰로 채워져 주민들이 더욱 격앙되었음
- 연구 용역팀의 발표자는 공역, 기상, 장애물, 소음, 환경 성, 접근성, 주변개발계획, 확장성, 사업비의 총 9개 항목을 검토한 결과 성산읍이 가장 높은 점수인 89점을 받았으며, 차점인 70.5점을 받은 대정읍 신도리 지역과는 환경성에서 현격한 점수(10.5점)로 차이가 남에 따라 복수입지를 놓고 주민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함
- 담당 국토부 공항행정정책관은 제주의 특성상 환경성과 소음에 가중치를 두고 평가했고 인천 국제공항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해도 결과가 같을 것이라고 밝히며, 애초 31개 후보지에서 압축된 4개 최종후보지에 대한 사전발표를 하지 않은 이유로 발표 시 마을별 찬반위원회가 만들어질 것이며 주민의견을 들으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는 우려를 표함
- 제2공항 예정지에 포함된 4개 마을 주민은 마을별 반대대책위원회를 확대하고 성산읍 제2공항 반대대책 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입지 선정에 대한 재검토가 없으면 도지사 소환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힘

○ 합의 및 전망

- 이번 설명회 파행에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성산을 제외한 모든 곳이 오름이나 곶자왈, 절 대보전 지역으로 수십만 제곱미터를 훼손하는 상황으로 어쩔 수 없었으며, 향후 정무부지사를 중심으로 한 전담기구를 통해 주민들과 24시간 무제한 상담 및 소통을 진행하겠다고 함
- 하지만 제주해군기지 및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 과정에서조차 우선하여 고려되었던 주민 수용성이 이번 제2공항 입지선정 과정에서 전혀 고려되지 못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 특히 제2공항 예정지로 성산읍이 최종 발표된 이후 11-12월의 서귀포시 토지 거래가 20.4%로 집중되었다는 토지거래 결과를 볼 때, 원주민을 배려하지 못한 제주시 정책 진행이 아쉽고 향후 보다 세심한 계획이 요구됨